



#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 SUMMARY



- 글로벌 공급망 관리 시장 규모 확대 예상, 공급망 ESG 관리 중요성 증가
- EU, 역내외 기업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인권·환경 영향) 실사 의무화 예정
- 독일, 2023 기업 인권 실사 의무 시행, 위반 시 최대 800만 유로 벌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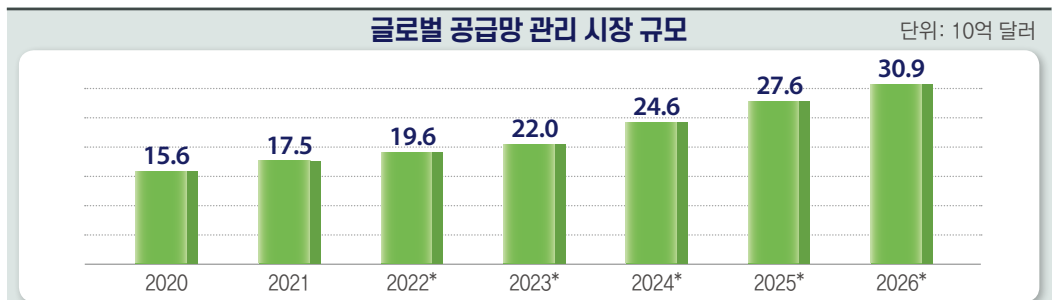


- 선제적 정보제공, 공급망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 구축 필요
- EU 역내외 기업 공급망 상에 포함된 중소·중견까지 ESG 실사법 영향 예상,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마련 필요

## 1 공급망 ESG 관리 중요성 대두

공급망 관리 시장 규모  
매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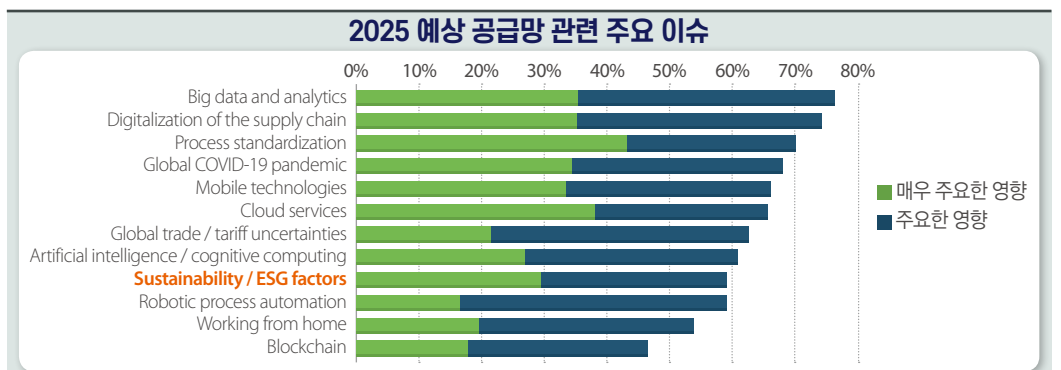
❖SCM(Supply Chain Management) 시장 규모는 매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26년에는 2020년(약 156억 달러) 규모의 약 두 배(30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추정치 \*자료: STATISTA

ESG 요소가 향후  
공급망 관리 이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이슈로 전망

❖2025년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에 '지속가능성'과 'ESG 관리'가 포함되면서 공급망 상에서의 ESG관리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 STATISTA \*261개 글로벌 업종별 기업·기관 대상 조사

주요국 공급망  
ESG 법제화 진행 중,  
국내 기업 대비  
필요성 증가

❖미국, EU,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공급망 ESG 실사에 관한 내용 법제화를 진행 중.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지사 및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의 대비 필요성 증가

## 2 주요국 공급망 실사 제도 현황

❖공급망 실사 제도 법제화는 주로 공급망 상에서의 환경적 영향과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이 차지, 특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은 당장 2023년 시행(기업 인권 실사를 골자), 국내 기업 또한 대비 필요

\*노동·인권 실사에 이어 환경 영향, 부패 등에 대한 실사로 확산 전망

미국,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실사

- ❖ '20.7월,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사례에 대한 감사·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노예제근절 기업인증법(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발의,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 대상
- ❖ '10,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제정, 캘리포니아 내 기업의 공급망 상에서 노예제·인신매매 근절 노력 공개 의무화

EU,  
역내기업 뿐 아니라  
역외기업의 공급망 상  
기업에도 ESG  
실사지침 적용 예정

- ❖ '21.3.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22.2. EU집행위 지침 초안 발표. 입법 완료 시,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 영향에 대한 식별, 예방, 완화, 피해구제 조치 시행 등 의무화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대상**

구분	기준	적용 기업 수
역내	대기업 고용 500인 초과 또는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9,400개 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고용 251~500인 또는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0.4억 유로 ~ 1.5억 유로, 순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시	3,400개 사
역외	대기업 EU 내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고용인원 수 기준 미적용)	2,600개 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EU 내 연간 순 매출 0.4억 유로 ~ 1.5억 유로,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시 (고용인원 수 기준 미적용)	1,400개 사

※자료: European Commission, 전경련 재구성

독일,  
2023부터 기업  
인권실사 진행

- ❖ '23, 공급망 실사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C) 시행 예정. 인권보호와 환경보호 강화에 초점,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등 인권 보호 개선에 목표. '23, 고용 3,000명 이상 기업 → '24,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 ❖ 실사의 의무가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 위반 시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 벌금 부과

- ❖ '17, 기업경계법(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시행 중, 임직원 5,000명 이상 또는 글로벌 임직원 10,000명 이상인 기업 대상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 ❖ '15, 현대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시행, '20. 기업 공급망 상에서 현대적 노예제 리스크 관련 조치 문서화 등의 지침 발표

일본,  
공급망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제시,  
일본 내 모든 기업 대상

- ❖ 공급망 내 인권리스크 감소를 위해 '22.8.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안) 발표, 인권방침 및 실사, 해결 방안 제시. 일본 내 모든 기업을 대상

- ❖ '19, 아동노동실사법(Child Labor Due Diligence law) 시행 중, 네덜란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모든 기업 및 공급망에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실사 진행과 기업 성명 발표 의무

**3 주요 업종별 BEST PRACTICE**

공급망 관리 우수기업  
TOP 25 中,  
미국기업 14개

- ❖ 미국의 공급망(Supply Chain) 전문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올해 ESG 요소를 고려한 Supply Chain TOP 25 기업을 발표. TOP 25 기업 중 한국 기업은 0개  
\* 2022년 공급망 관리 우수기업의 경우 미국이 14개, 중국·영국·프랑스·독일이 각 2개

2022				2022			
순위	회사명	국가	업종	순위	회사명	국가	업종
1	시스코 시스템즈	미국	ICT	14	월마트	미국	유통
2	슈나이더 일렉트릭	프랑스	에너지	15	HP	미국	ICT
3	클게이트 팔모라이브	미국	소비재	16	Diageo	영국	식품
4	존슨&존슨	미국	제약	17	Dell	미국	ICT
5	펩시코	미국	식품	18	인디텍스	스페인	의류
6	화이자	미국	제약	19	BMW	독일	자동차
7	인텔	미국	반도체	20	AbbVie	미국	제약
8	네슬레	스위스	식품	21	지멘스	독일	산업재
9	레노보	중국	ICT	22	아스트라제네카	스웨덴	제약
10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ICT	23	General Mills	미국	식품
11	로레알	프랑스	화장품	24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영국	담배
12	코카콜라	미국	식품	25	알리바바	중국	유통
13	나이키	미국	의류				

※가트너는 매년 공급망 관리 TOP 25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 최근 발표에는 높아진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순위 선정에 공급망 ESG 관리 요소를 포함

※자료: Gartner(2022)

애플, MS 등  
전자 분야에서는  
광물조달,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

❖업종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앞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주도·참여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급망 ESG 실사 내용은 업종별로 차이 존재. 해당 업종의 주요 이슈 파악이 관건

나이키, 인디텍스 등  
의류·패션에서는  
공급망 인권 관리가  
주요 실사 이슈

업종별 주요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관리 사례		
업종	기업명	실사 내용
전자	애플	환경, 인권, 안전에 대한 협력사 사업장 현장 실사. 2021년 기준 52개국 1,177개 협력사 사업장 현장 실사 진행, 실사 내용 계약관계 반영
	삼성전자	인권침해·환경파괴 이슈가 있는 광물 조달에 대해 '책임광물 관리체계'를 통한 실사 진행, 2021년 493개 사 현장 실사 점검
자동차	BMW	약 3,900개 협력사 ESG 평가 및 1,317개 협력사 현장 실사 진행.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협력사와 거래 해지 가능
섬유(패션)	인디텍스*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실사 프로세스 확립. 패스트 패션 분야 인권 실사 확대
화학	바스프	자사 및 직·간접 공급사 활동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Value-to-Society 모델 개발, 해당 모델을 통한 실사 진행
제약	룬드백*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급망 실사를 수요기업에까지 확장,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주 1) 인디텍스: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ZARA의 모회사  
2) 룬드백: 덴마크 소재 다국적 기업 제약사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4 한국 정책방향 시사점

공급망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립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 선제적 정보제공, 공급망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ESG 관리 전반에 대한 인프라 확립 필요

❖당장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EU 역외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에까지 실사 지침의 영향이 미칠 전망, 국내 중견·중소 기업 대비책 마련 필요

❖공급망 ESG 관리는 국경의 경계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업종별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독려 등 국내 업종별 지원책 필요

\*글로벌 기업이 주도·참여하는 주요 이니셔티브는 전자·자동차 업종에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바이오·의약 업종에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은 현재 시작 단계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독려 등 업종 간  
대응체계 구축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명칭	업종	주요 활동	주요 참여 기업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자 자동차	인권, 안전, 환경, 윤리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 및 회원사 실사·평가	애플, 포드 등 213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6개
Tfs(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	가입에 별도 조건 필요, 노동과 인권, 안전, 환경, 지배구조 분야 공급망 실사 진행	헨켈, 바스프 등 40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0개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바이오 의약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 환경, 관리 시스템 등 5개 항목으로 공급망 내 계약관리	화이자, AbbVie 등 71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1개
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의류	지속가능성 표준화 측정 플랫폼인 히(Higg)을 활용하여 패션업계 공급망 관리	나이키, 뉴발란스 등 283개 기업 참여, 한국 기업 0개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쟁점과 체크포인트

- ✓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ESG 관리 및 실사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해외 다국적 기업의 실사가 진행, 국내 대·중견·중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 주요 실사 내용으로는 노동·인권, 환경 영향, 안전·보건 등으로, 실사 내용은 추후 확대 전망, 실사 결과에 따라 거래 해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 필요
- ✓ 공급망 ESG 리스크 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마련 및 해외 수출/진출 기업에 대한 공급망 ESG 실사 대비 지원책 마련 시급

■내용문의: ESG팀 김준호 팀장(02-3771-0455), 조병철 연구원(0448) bccho1024@fki.or.kr



#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 A Warning to Biden: Europe Is Headed for Energy Chaos This Winter

이번 겨울, 유럽은 에너지 카오스로 향하고 있음

Jack Spencer  
2022. 11. 8



<https://www.heritage.org/energy-economics/commentary/action-plan-americas-energy-security#MEC-Embedded-Ask>

### SUMMARY

현재 유럽은 에너지가격 상승과 연료 배급제, 탈산업화를 겪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에너지정책을 유지한다면 향후 미국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

❖ 헤리티지 조사 결과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향후 18년 동안 GDP 7.7조 달러 손실과 120만 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독일의 경우 화석연료 감소·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를 위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고, 이는 해외 에너지 의존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

❖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서 독일은 높아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으로 고전 중

❖ 독일 상의, 기업 78%,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이 사업의 장 큰 위험

\* 2023년 유럽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은 2021년의 약 3배가 될 것으로 전망(골드만삭스)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풍부한 석탄·천연 가스 자원과 원자력의 활용 가능성을 저버리고,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의 결과에서 비롯

❖ 미국 역시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한다면 유럽과 같은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경험하게 될 것

❖ 무리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의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버려둔다면 피해는 시민(유권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



## Taking big leaps in value chain resilience: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적응과 전환을 통한 가치사슬 복원

Felipe Bezamat and Memia Fendri and Markus Vejvar  
2022. 9. 13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9/taking-big-leaps-in-value-chain-resilience-adaptation-and-transformation/>

### SUMMARY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비용 최적화' 논리에 따른 가치 사슬은 불가능. 규제가 강화되고 고객이 다양화되면서 기업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

❖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 구성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반으로 고안

❖ '비용 최적화'에 맞춰진 글로벌 가치 사슬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적시성 (Just-in-Time)이 주요 가치로 작용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현재 장·단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치 사슬 설계에 집중

❖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 중 미래의 불확실성로부터 회복능력을 갖춘 기업은 12% 수준

단기적으로 제조업 기업과 공급망 상의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사슬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지정학적 환경 및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야 함